

# 車보험료 지역별 차등제 도입땐 호남이 가장 비싸진다

도로 환경 열악 ... 손해율도 전국 최고

정부 추진 방침에 지역 소비자들 불만

정부가 지역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를 도입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는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보험금 비율)이 높은 지역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비싸게 물리고 반대 지역에는 싼 보험료를 적용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사고가 많은 지역 주민은 똑같은 차량을 몰더라도 보험료를 더 물게 된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3개 부처 주관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내 교통사고 사상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역별로 자동차보험료를 차등화해 지역별 경쟁을 유도, 자치단체장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 수립이나 안전 의식 제고에 노력할 수 있는 모티브를 주자는 취지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는 선진 8개국(G8)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도 모두 시행중인 제도"라며 "지난달 광역지자체의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회의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자체에서 반발이 있어 실득과 의견수렴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구역별로 차등화할지, 도시·농촌을 기준으로 차등화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사회적 합의만 이뤄지면 제도는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의 도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에도 금융감독원이 도입을 추진하다 일부 지자체와 여론의 반대로 접은 바 있다.

지역별 차등제는 손해보험업계의 숙원이기도 하다. 지역에 따라 타가는 보험금이 편차를 보이는 만큼 보험료를 달리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라남·북도와 강원도, 인천시 등의 손해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경상남·북도와 대구시, 부산시 등은 손해율이 낮다. 문제는 공교롭게도 이 구분이 영·호남이란 지역 구분과도 맞물려있어 '또 다른 지역차별 아니냐'는 반응을 불러 일으킨다는 점이다.

보험업계에서는 호남지역의 손해율이 높은 이유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로 환경을 꼽는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 보험료를 많이 받겠다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국 아생 컬러 버섯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서울대공원 식물원에서 한

국아생버섯식물 전시회를 개최한다. 농진청이 개발한 다양한 컬러 버섯을 전시하

며 아생 독버섯과 독초를 구분하는 교육도 진행된다.

/연합뉴스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서울대공원 식물원에서 한

국아생버섯식물 전시회를 개최한다. 농진청이 개발한 다양한 컬러 버섯을 전시하

며 아생 독버섯과 독초를 구분하는 교육도 진행된다.

물가 ↑ · 내수 ↓ · 고용 ↓

한국경제 '트리플 악재'?

KDI 원장 하반기 경제 전망

하반기에도 물가상승 기조속에 내수 둔화가 지속되면서 취업자 증가세가 꺾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정식)가 개최한 '2008년 하반기 경제전망과 대응 과제' 세미나에서 "우리경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GDP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실질구매력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영향이 앞으로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했다.

현 원장은 금년 취업자수 증가세는 지난해 28만명에서 올해 20만명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그 원인으로 제

조업의 자동화·IT화, 유통서비스업의

대형화·전문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구조조정 등 구조적 요인에 경기적 요인이 가세한 것으로 해석했다.

현 원장은 한국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규제완화, 공공 민영화, 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한·미 FTA 비준, 법질서 확립 등을 통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유가전망에 대해 "3분기 135달러로 상승한 후 4분기 다소 하락해 130달러 내외로 하방경직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이는 원유 수급 불균형, 투기수요 확대, 자산시장 침체 장기화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공부문 임금 인상 최대한 억제

정부, 기대인플레이션 우려 ... 수출기업·금융권 상승압박 고조

정부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 공공 분야 종사자의 임금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기대인플레이션이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이다. 공무원노조도 임금인상 요구를 자체하는 대신에 공공요금 인상 동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반면 일부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은 물가상승을 이유로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업계 등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는 올해와 내년의 경기상황 등을 감안, 교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인상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편성하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은 올해의 2.5%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경제가 낮은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

원"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의 라일하 정책실장은 "꼭어도 물가상승률, 대기업과의 격차해소 등이 임금인상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에 공공요금과 학교 등록금 동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성과급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 노조들은 높은 물가상승을 이유로 비교적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에 임금을 4.6% 올린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6.4% 인상안을 내놔다. 노조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업계 실적도 좋은 만큼 기본급 인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도 정규직 5.8%, 비정규직 11.6%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측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요구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펀드 비용 엉터리 공시

투자자 직접 피해 우려

자산운용사들 수수료 등 허위 공시

투자자들이 펀드에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펀드의 비용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펀드관련 공시를 관리하는 자산운용협회와 공시주체인 일부 자산운용사들이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방치한 흔적이 나타나 투자자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총비용(TER) 공시 '엉터리'=14일 자산운용협회와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 우리CS자산운용 등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자사가 운용하는 클래스펀드의 TER를 자산운용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순자산액이 2조2천672억원에 달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3역만들기기술로본주식1 클래스A'의 경우 신박수소율과 TER가 모두 2.5%인 것으로 공시돼 있다.

TER는 운용, 판매, 수탁, 일반 등 각종 신탁보수와 운용에 관련된 각종 비용을 모두 합친 뒤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공시 내용대로라면 이 펀드는 펀드가 보유한 주식 등의 거래수수료, 채권가격 등 구입비, 운용보고서 제작 및 발송료, 회계감사비 등 운용에 관한 각종 비용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 공시만 본다면 자칫 비용이 저렴한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TER공시 오류, 알고도 모른 척? =협회 관계자는 "TER의 경우 개별 자산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오류가 발생했다고 일일이 수정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TER 등을 계산하는 사무수탁회사 관계자들이 지난해 한차례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은 있지만 사무수탁회사 관계자들의 이직 등으로 인해 흐지부지됐다"고 전해 이같은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업계는 TER 공시를 처음 실시할 때 협회가 세세한 부분까지 적시해 주는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책임이 있지만 운용사들의 이 같은 공시로 TER가 낮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방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금융권 대출관리 강화

금융당국, 오늘 시장 위험요인 점검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하반기 금융시장의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한 합동 점검회의를 갖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국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에 따른 금융권역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 관리강화 등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내놓으면서 금융권의 여신심사와 건전성 관리실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기업의 인수합병(M&A)자금에 대한 대출 심사기준의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병동 은행회관에서 시종은 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신 심사와 연체율 관리의 강화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전 위원장이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 3월 25일 이후 2번째다.

물들이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급등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경기가 하강할 경우 대출부실과 은행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 위원장은 14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상황 악화와 금융시장 불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수의 허위광고 불법금융업 50곳 적발

금융감독원은 6월 한 달간 고수의 유혹 허위광고 등 불법 금융영업업 한 50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에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며 카드 회원을 모집한 업체가 21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사수신업체 12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10개, 무허가 자산운용업체 7개 등의 순이었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마카오 카지노 투자업체 등을 가장하며 '1년 투자 때 투자금의 300% 지급 보장'과 같은 광고를 하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5개 유사수신 업체는 인터넷 서버를 외국에 두고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원은 이들 업체의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무등록 카드 회원 모집업체는 '무직자 카드 발급 100% 가능', '누구나 발급 가능' 등의 광고를 하며 회원을 유치하거나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먼저 받아 가로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건설경기 침체에 건설인력도 줄인다

하반기 건설사 1,100여명 채용 ... 작년보다 3.5% ↓

상반기 공기업 채용 규모도 작년의 절반 수준 하락

올해 하반기 주요 건설사들이 채용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 52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채용전망을 조사한 결과 40.4%가 '하반기에 매출 신규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채용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은 34.6%였고, 미정인 곳도 23.1%에 달했다.

채용계획을 확정한 기업의 채용에

상인원은 1천1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145명보다 3.5%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별로 삼성엔지니어링이 9월에 매출 신입사원을 200여명 뽑는다. GS건설도 9월초 100여명 규모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같은 달에 포스코건설이 150명을, 한화건설은 60명을 뽑을 계획이다. 두산건설은 11월에 60여명, 코오롱건설은 10월에 40여명 규모로 신규인력을 충원할 예

정이다.

올해 상반기 공기업의 채용규모가 지난해의 절반 남짓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주요 공기업 19개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매출 신입사원 채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이 뽑은 인원은 모두 8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475명과 비교해 43.1% 감소했다.

올해와 지난해 채용을 진행한 곳은 각각 14개사, 15개사로 비슷한 빈도로 채용을 실시했지만 기업당 채용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 게다가 올해 하반기에도 공기업의 채용시장 전망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에이치아이코리아	생산팀/포장직,원료배합직/정규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6	062-513-8000
한국쓰리엠	품질관리/안전관리 엔지니어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6	061-330-7020
누리산업개발	경리/총무 사무직 여직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7	062-956-1004
롯데삼강	[전남·광주] 동지역플 가스활명수 배송 2.5톤 기사	고졸/경력무관	2600~2800	07/17	02-5258-4565
국제컴퓨터학원	[광주 북구]CAD,3DMAX, 0A강의 전임 및 시간강사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7/17	062-266-6617
세우는건설	가시설 및 부대토목 대리, 과장급	초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07/17	010-5347-5255
화인한천	정규직 회계, 경리업무 여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7	061-383-0345
우암한방병원	접수, 수납 경력직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7/17	062-260-2803
성화대학	[평생교육/골프스포렉스] 정규직 교직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7/18	061-430-5004
대진산업	[디자인부/영업부]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7/19	062-530-0895
광주과학기술원	Windows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9	062-970-3262
서남일보	취재 및 영상취재 기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2	062-224-8900
유로넷	[연봉2400]SK텔레콤 광주 114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7/23	02-780-9595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